

배포일시	2022년 10월 5일(수)
보도일시	즉시

< 민주연구원 정책브리핑 >

위기의 가계부채, 특단의 가계지원 대책을 마련하라

-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(원장 노웅래 의원)은 10월 5일(수) “위기의 가계부채, 특단의 가계지원 대책을 마련하라” 라는 제목으로 정책브리핑 보고서를 발표했다. 보고서는 “가계부채 현황과 가채부채 증가의 영향 및 문제점, 그리고 해결방안”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했다.
- 남국현 연구위원은 “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소득분위별로 1분위 4배, 2분위 2.8배, 3분위 2.4배 순으로 나타나, 모든 계층에서 가계부채가 높지만 저소득층은 더욱 위험한 수준”이라고 지적했다. 남국현 연구위원은 “부채가 있는 가구 중 고위험가구*는 1분위 45.8%, 2분위 32.5%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. 전국 가구 수로 환산하면 고위험가구는 3,305천 가구로 가계부채가 심각한 수준”이라고 설명했다.
* 소득대비 원리금상환비율(DSR)이 40%를 초과하거나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100% 넘는 가구
- 민주연구원은 “소득분위별 고위험가구를 추출하고 가계부채 관련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, 소득1분위의 87%가 원리금 상환이 생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”고 설명했다. 또한 “또한 소득1분위의 45%가 부채상환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고, 전국 가구 수로 환산하면 1,044천 가구가 ‘상환 불가능’이나 ‘기한유예’가 필요한 가구로 부채위기 가구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”고 지적했다.

- 보고서는 부채증가의 원인으로 “저소득층에서는 생활비, 부채상환의 응답비율이 높아 생활고와 빚을 해결하기 위해 돌려막기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, 이들 위기 가구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” 고 지적했다.
- 남국현 연구위원은 “금리폭리방지법, 불법사채금지법, 금리자동인하법 등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금리인하, 불법사채근절 등 금융취약계층의 부채상환 부담이 해소되어야 한다” 고 설명했다. 또한 “신용보증재단을 통한 고위험 가구의 저금리 대환대출,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로 금융지원책 마련, 생활비로 가계대출을 늘리는 가구를 위한 생계비 지원정책, 저소득층 가계부채 고위험 가구 발굴과 금융지원 시스템 구축 등 저소득층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” 고 지적했다.